

- 01 평화누리
- 02 책을 열며 - 이라크 파병,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포장하지 말라! - 변연식
- 03 [특집1] 35차 SCM 반대투쟁
 - 35차 SCM 결과 -이철기 평통사 지도위원 인터뷰
 -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 아직 늦지 않았다 -김은선
 -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반대투쟁-평택대책위, 만도노조 인터뷰
- 04 [번역글] -세계적인 미군기지 재편은 미군의 '효율화' '분산화' '기동화'가 그 목적이다
 - 모리 요헤이
- 05 [시론] -노무현 정권 1년을 돌아본다: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이재봉
- 06 [사업평가] -2003년 평화군축운동 평가와 과제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유영재
- 07 [특집2] -'신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 지상중계
- 08 [만평]
- 09 [방북기 - 평양에 다녀와서 -김홍수
- 10 [현장의 소리]
 - 17년 정든 공장 폐쇄저지 투쟁을 마무리 하며... -고춘화
 - 전국노동자 대회 추모사 -김진숙
- 11 회원의 글
 - 제4회 평화사랑방에 다녀와서 -황영희
 - "선생님, 수업료 세일은 안 하시나요?" -황윤미
- 12 지역평통사 탐방 - 대전충남 평통사 -유병규
- 13 [평화카페] - 궁전에 사는 작은 천사들 - 유정섭
- 14 포토뉴스
- 15 NEWS
- 16 [자료실]
 - 2004년도 F-15K 도입 예산 삭감 국회 청원서

[책을 열며]

이라크 파병,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포장하지 말라!

평통사 공동대표 변 연 식

지난 11월 2일 이라크 저항의 날... 저항세력의 미사일에 맞아 떨어진 치누크 헬기에 탑승했다 숨진 미군 15명이 그들의 ‘자랑스런’ 성조기에 포장도 되지 못한 채 처참한 모습으로 독일 공항에 내려지는 모습을 외신으로 보았습니다. 정확히 베트남전의 이미지이고 메시지입니다.

11월 7일 서울을 방문한 미국 국제행동센터(International Action Center)의 새라 플라운더스(Sara Flounders)는 미국의 한국군 파병 압력과 관련하여 “이렇듯 매일 저항이 계속되고 미군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 나가면서 부시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되고 있다. 때문에 다른 국가의 군인이 대신 싸우고 대신 죽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미국의 못된 짓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녀는 계속 강조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의 고엽제처럼 “이번 전쟁에서 대략 1000~2000톤이 뿌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열화 우라늄탄은 그들이 미군이거나, 한국군 비전투병이거나, 공병이거나 이라크 민중이거나 가리지 않고 그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1991년 걸프전 참전 군인의 30%이상이 한참 일할 나이인 30대에암과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라크가 결코 갖고 있지 않은 대량 살상무기라는 것을... 단지 최대의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군수업체들이 언론보도를 통제하여 처참한 전쟁의 실상이 보도되고 있지 않을 뿐이라고 합니다. 어찌 이런 곳에 비전투병, 전투병 논란이 필요하냐고, 어떻게든지 이미 수렁에 빠진 부시를 실패하게 만들어야 다음 목표인 북한으로 가지 않는데 왜 파병하여 부시를 도와야 하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번 전쟁에 반대해 입을 열면 20년 징역을 살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USA라는 익명으로 한 인터넷(Coalition for Free Thoughts in Media: 2003년 10월 12일)의 인터뷰에 응한 이라크 참전 미국 군인은 “부서진 탱크 주위에 올라와 먹을 것을 찾다가 짐속탄에 깔기 깔기 찢어져 죽은 이라크 아이들 생각에 집에 돌아온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의 손을 잡고 피 흘리며 죽어간 여러 동료들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합니다. “죽어가는 동료 병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딸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었어요. 그의 딸은 이번 전쟁 발발 3일 후에 태어났대요. 그는 마지막 거친 숨을 뱉어내며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딸은 영원히 그를 볼 수 없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이 병사가 이국 땅에 피를 뿌리고 있는 동안 조지 부시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이라크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를 입만 열면 외어대는 부시와 국방부와 그밖의 명청한 자식들에게 그렇게 애국적인 당신들이나 가서 싸우다 죽으라고... 그리고 박스(box: 관을 시니컬하게 표현하고 있다.)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군요.”

“마치 베트남 전쟁 초기 같아요. 저의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12살이 었어요. 그가 남은 삶 동안에 겪은 처참함과 고통을 잊지 못할거예요. 제가 이제 그의 처치가 된 거예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양심적 파병 거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라크에 가기 전만 해도 양심적 파병 거부자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그들이 이 전쟁을 거부해 이미 엄청난 부자들인 부시와 펜타곤의 이익 때문에 개죽음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미국이여 잠에서 깨어나라! 당신의 아들딸들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죽음 당하고 있다. 이 전쟁은 자유를 위한 싸움도 아니고, 테러 종식을 위한 싸움도 아니다. 우리를 집으로 보내달라. 우리는 지금 석유와 기업의 탐욕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으로 본 이라크 참전 군인 부모의 말을 빌리면 미국 워싱턴의 정치인 537명(대통령1, 부통령1, 상원 100명, 하원 435명)의 자녀 중에서 군 복무 중인 자가 단 1명 뿐이더군요. 어찌면 그리 복사판인지요. 한국의 파병 찬성을 외치는 사람들, 정치인들, 관료들! 여기는 작은 미국인가요. 지금 그럴듯한 말로 포장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들이 가서 box로 돌아오십시오.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성조기로 포장도 되지 못한 채 들것에 실려 내리는 초라한 미군 병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나는 이 글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어린 병사들이 저렇게 포장도 되지 못한 채, 아마도 미군이 아니니까 중간 기착지인 독일로 가는 특권(?)도 없이 죽어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선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 마침 이 글을 쓰는 오늘 (11월 20일)은 1905년 위암 장지연 선생이 을사조약에 항의하여 시일야 방성대곡을 토해낸 지 98년째가 되는군요. 위정자들이여,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당신들의 이름과 행적을 조목조목 외우며 외치는 을사오적(파병 오적) 외무대신, 참정 대신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십시오.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특집1]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결과
- 이철기 평통사 지도위

원 인터뷰 -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아 올 4월부터 한미 양국은 향후 50년 동안 적용될 한미동맹의 틀을 마련한다고 공언하며 그에 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부분적인 면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대개 그간 논의되어 온 사항들이 11월 17~18일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25차 MCM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항들은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장래, 우리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입니다. 이에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서면 인터뷰를 실습니다.

- 편집자 주

▶지난 11월 18일 한미 양국은 35차 SCM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주목하였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뜻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의 군사전략적 역할이 지금까지 말해오던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에서 다른 성격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의 중심적 역할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로 바뀌고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신속히 이동 투입되는 ‘신속대응군’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남한 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아시아 지역군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개편은 비단 주한미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 해외 주둔미군의 개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쟁개념이 첨단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전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함에 따라 지금처럼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시아지역 주둔미군, 특히 주한미군의 개편 필요성이 어느 지역 보다 큽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외전략 목표가 중국 봉쇄에 두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전략적 봉쇄선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냉전시대 동북아 주둔 미군은 소련을 주 대상으로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동북아 쪽에 치우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주 대상이 되었으므로 동북아 주둔미군을 보다 남쪽으로 이동해서 재배치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전환하게 되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봉쇄전략을 위한 '전진배치 첨병'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중심이 중국에 대한 봉쇄 내지는 견제전략에 두어짐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의 주요 역할이 중국견제역할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해공군력 강화와 한국에서 해공군기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전진작전기지(forward operation base)'로 활용되고,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첨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미국의 MD체제에 끌어들이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된다면 한국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X-band 지상레이더기지가 한국에 설치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신의 취약한 핵억제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MD망 구축을 위한 지상레이더기지가 설치된 한국을 핵공격의 목표로 설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줄지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표적이 되고 핵공격 목표가 되어 핵위협 공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재편과 이에 따른 역할 변화는 한반도 및 주변정세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패권주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은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국은 한강 이남으로의 주한미군 이전과 두 개 권역으로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실제 군사적·정치적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주한미군 재편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지상군을 줄이는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의 상당한 병력을 감축하여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억제력의 의미가 있던 미 제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오산 미공군기지를 100만평 정도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새로운 해군기지를 확보하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주도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우리 해군의 계획이 미국의 이러한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그러한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정책과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화순항이 미국의 전진기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미국은 현재 일본에 한정돼 있는 해군기지를 한국에서도 확보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지정확적인 가치 면에서 제주 화순항이 그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제7함대사령부가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와 사세보항을 보완해주는 전진기지로 화순항을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 해공군기지의 확대는 대중국봉쇄를 위한 단순한 해공군력의 증강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에 끌어들이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결국 대폭 확장되는 오산공군기지는 미국 MD체제의 최전방기지로 전략하게 되고, 제주도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 MD체제의 주요 거점 노릇과 미국 핵함정과 핵잠수함들이 이용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미연합전력증강의 일환으로 미국은 이번 SCM에서 2003~2005년 사이에 150개 분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MCM에서도 ‘연합군사능력 발전에 관한 서한교환’(그 내용은 안 알려짐)이 있었던 것으로 국방일보(11월 21일)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연합전력증강의 군사적 의도와 그 문제점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6년까지 1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에는 패트리엇 PAC-3 도입을 비롯해 최신예 공격용 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배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이러한 전력증강에 맞추어 한미연합전력증강이라는 구실 아래 한국군에도 유사한 무기들의 구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아시아 지역군으로의 개편과 중국견제라는 군사전략적 필요성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2004년 한국 국방비의 대폭증액을 요구했고 심지어 구매무기의 목록까지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무기체계들 중에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무기체계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자주국방은 고사하고, 미국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에 더욱 견고히 편입되고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군과 미군의 이른바 역할분담론에 따라, 한국군의 지상전력 강화와 미군의 해공군력과 정보력의 담당을 강조함으로써, 한국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강 이남으로의 미군 재배치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마치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처럼 보면서 반대하고 이를 막기 위해 더욱 미국에 굴종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문제가 갑자기 불거진데는, 한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미분위기를 잠재우고,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고, 아울러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언론과 고위관리들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감축 내지는 철수의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대등한 한미관계를 들고 나오면서 종속적인 한미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한국의 새정부에 대한 압력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재편과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전세계 주둔미군의 재편의 일환으로 추진되

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반대한다고 중단되거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이제 주한미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자신이 공언하고 있는대로 더 이상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더라도 한국군만으로도 충분히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전력의 대폭적인 증강과 핵선제전략과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략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전쟁억제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전쟁유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한국 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모든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용산 기지 이전이 한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되는지요?

이제 미국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국의 방어와 대북 전쟁억제력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주둔하고 있고, 이번 주한미군 재편과 재배치는 미국 자신의 그 같은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1990년에 이전합의 후에 중단되었던 이전 문제가 최근에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한국측의 필요성 보다는 전세계 주둔 미군을 재편 및 재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1990년에 맺어진 합의사항들은 무효이며, 백지상태에서 재협상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MCM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구 추진단 구성을 위한 약정(TOR)’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는 가운데 외양상의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체제에서 독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체제에 계속 종속시키기 위해서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장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 한국군의 독자전 수행과 정보수집 능력 미비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에 따라 1990년부터 추진된 3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의하면, 늦어도 종결 년도인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 3단계 감축계획이 추진되던 1990년도 초에 비해 한국군이 현대화되고 그 전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지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등 평화통일운동단체가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활동해 나가야 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통사는 평화통일운동, 특히 주한미군문제와 군축문제와 관련해 다른 어떤 운동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성과와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무기문제와 군시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전문화를 기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키기 위하여 대중화를 기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 아직 늦지 않았다

뉴스위크 기자 김 은 선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사전협의를 마치고 한국 측 대표단이 귀국했다.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다섯 차례의 한·미 협상도 끝났다. 남은 것은 책임자들의 서명뿐이다. 이는 11월 17일~18로 예정된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 등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등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는 한·미 협상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까.

위성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1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국 내 분위기와 동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다 결말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새 협정이 체결되면 90, 91년 합의·양해각서는 무효화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90년, 91년 합의를 무효화하더라도 새로 체결되는 협정에 90년, 91년 합의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데 있다. 아직 용산기지 이전 합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다. 하지만 본 기자가 취재, 보도했던 90년 합의·양해각서와 91년 소파합동위원회 각서, 그리고 9월 4일 제4차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약에서 미국 측이 제시했던 협정(안)과 이행합의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악이 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주한미군 이전에 드는 비용 일체를 제공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드는 비용 한계선조차 정하지 않아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무제한 ‘퍼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결정적 근거가 되고 있는 90년 합의·양해각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6월 25일 이상훈 당시 국방장관과 메네트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 기지이전과 관련한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에 각각 서명했다. 합의각서는 용산 기지이전에 관한 원칙 및 기본골자였고, 양해각서는 합의각서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것이었다. 두 각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 쪽의 이전 비용 전액 부담’이었다. 당시 양국 대표는 비공개리에 각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90년 합의의 내용은 13년 동안 일부 관계자들만 쉬쉬하며 숨겨 오던 철저한 비밀사항이었던 것이다.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이전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한국정부가 부담하며, 이전에 따른 매점·위락시설 등의 영업손실도 한국이 보상하고, 개인별 이사 비용도 부담하며 기지 오염에 따른 환경복구 의무의 면제까지 포함돼 있다.

내용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다.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기지이전비용(엄밀히 말하면 기지이전비용이 아니라 기지이전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비용)을 대자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국회에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밀실에서 비밀 조약을 맺고 13년 동안 이를 숨겨온 것이다. 90년 조약의 불법성과 위헌성은 사실은 헌법학자 및 법률가,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최근 공개된 91년 안기부 문건에서도 드러나듯, 90년 당시에도 노태우 정부는 합의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는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것이다.

‘한국측 비용 전액부담’ 원칙의 근거로 미국 측이 제시하는 것은 실상은 90년 합의가 아닌, 91년 5월 15일 한국과 미국 측 소파합동위원회 대표였던 반기문 당시 외무부 미주국장과 로날드 R. 포글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체결한 각서다.

각서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주둔군지위협정하의 소파 합동위원회’의 합동 위원회를 위한 각서다. 91년 5월 15일 체결되고, ‘1991년 5월 20일 긴급조치에 의해 승인’됐다고 돼 있다. 세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각서는 제1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시설과 구역의 반환 및 공여에 대해 동의”하며, 제2항은 “미국에 비용부담을 지우지 않고 모든 시설과 구역, 도로 통행권을 제공한다”하며 제3항은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1990년 6월 25일 주한미군사령관과 한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합의·양해각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인정한다...SOFA 조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다.

미국도 이때 이미 90년 한·미간 합의가 갖는 위헌성 또는 불법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90년 합의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서였다. 그래서 미국은 90년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별도의 문서가 필요했다.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보다는, SOFA에 합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는 SOFA 합동위원회간의 합의를 통해 별도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90년 합의각서에는 한국 측의 입장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미국 쪽에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는 ‘한국을 위한’ 안전장치 조항도 규정돼 있었다. 90년 합의각서 ‘제9조 유효일시’는 “만약, 최종 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 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이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합의를 원했던 것 같다. 그것이 바로 91년 5월 15일자 한·미간 합의이다. 이에 따라 90년 한·미간 합의·양해각서는 한국 국회의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조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완벽한’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의 국방장관이 자국에 불리한 합의문서를 작성해 놓자 이를 알고도 외무부 국장이 나서 그대로 준수하겠다고 확인해준 셈이 된 것이다. 이로써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미연례안보회의 사전 협의에서까지 깰 수 없었던 기지 이전의 불평등성은 91년 합의로 인해 근원적으로 봉쇄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측은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는 사실상 불법적인 90년의 합의·양해각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91년 합의를 한·미간 외교 당국자간의 협상이 아닌 SOFA에 근거를 둔 한국정부와 주한미군간의 협상으로 유도했다. 새로운 외교적 협상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뿌리를 둔 주한미군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미국 측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했기 때문이

다.

91년 합의의 서명과정은 같은 해 작성된 안기부 문건에 잘 나와 있다. 이 문건은 “이번 합의각서의 미국 측 실무 서명권자인 포글만 주한미군부사령관은 5월 13일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고, 외무부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내용(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으며 “반국장은 그간 국방부가 ‘군사비밀’을 이유로 외무부에 이첩을 보류해 오다 최근에야(5월 8일) 합의각서의 사본을 전달, 아직 검사중임을 들어, 서명을 거절해 왔으나, 미군 측의 반발을 의식해 5월 20일 서명한 바 있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외무부는 “주한미군 측도 동 각서의 체결과정이 한·미행정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어, 사후에라도 합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외무부 측의 자인서를 청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러한 90년과 91년 합의를 근거로 한 2003년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시작 단계부터 과거 불평등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90년 합의의 불평등성은 지난 9월 4일 제4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약’ 때 미국 측이 제시했던 협상 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놀라운 것은 한국 측 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협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안을 기본 틀로 일부 수정하거나 논의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중심지로부터 미군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안)과 이를 구체화한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 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안)과 이행합의서(안)은 90년과 91년 합의 내용을 ‘리메이크’한 것에 불과하다. 협정(안)과 이행합의서(안)에는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조달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부대와 임무, 기능, 인력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수송 서비스는 물품으로 제공받거나 운송기금을 통해 조달될 것”이며 “운송기금은 한국 내 은행에 양측이 정한 구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용해 운용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본부, 행정국, 의료시설, 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들, 주한미군 병력 및 동반 가족들을 위한 숙소 등 구체적 항목도 일일이 나열돼 있다.

한국쪽 비용 부담의 원칙 자체도 문제지만 그 원칙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의 가능성은 더욱 문제이다. 기지의 수준은 현재의 용산 기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순전히 새로 이전된 시설의 독자적인 기준, 즉 미 국방부 기준에 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국방부 기준이란 내재·피폭 설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심지어 미국에서 건축자재까지 수입해 와서 제공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군기지 기준에 비해 수 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용산 국방부 청사 인근에 잔류할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본부와 지원부대를 위한 모든 시설들을 제공하는데, 시설물의 전면적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비용까지도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 기지이전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모든 인적·물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철저히 한국 측 몫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이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한국 정부와 협상단의 태도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 “우리가 요구해서 이전할 경우는 우리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 왔고, 이는 한미간에 합의된 원칙”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오래 전부터 주한미군을 동북아 지역군 기동 타격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도 기지이전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한국 측의 비용부담 원칙은 수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용산기지 이전이 한국 측의 요구가 아닌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등 미국 측의 요구 또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다는 사실이 한·미 양측에 의해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한국 대표단은 이런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제기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불평등 조약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청구권'과 '영업손실 보상' 조항만을 협상 타깃으로 삼아 협상테이블에 임함으로써 최소한의 성과밖에 거둘 수밖에 없었다. 협상의 한 쟁점이 됐던 '청구권' 조항은 미군이 기지이전 과정에서 고용인들을 해고했을 때 이들이 배상을 청구해오는 경우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영업손실 보상' 조항은 복지·휴양시설이 이사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을 한국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두 조항에 대한 문구만 조금 수정됐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한국 측 비용 부담의 원칙도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협상에 저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90년, 91년 당시 용산기지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당사자들이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정부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13년간 끌어온 용산기지 이전 논의는 12월까지 모두 타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3년 전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타결을 앞두고 여론이 들끓자 한·미 양측은 '포괄협정-이행합의서-기술양해각서'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역시 90년 합의의 또 다른 '리메이크' 작품일 뿐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할 포괄협정은 개괄적 내용만을 명시하고,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90년 합의 내용에는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각서에 그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극히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삭제를 두고 큰 성과 거둔 것처럼 떠벌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뒤틀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바로잡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 반대투쟁

평통사는 지난 10월 29일, 평택대책위 사무실에서 미군기지 평택 총집결에 반대하는 '평택 시민 총궐기대회(10월 31일)'를 준비하느라 바쁘신 김지태 팽성읍대책위원장과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총집결 범국민궐기대회와 때를 같이 하여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가 2시간 파업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 포승면 만호리에 있는 만도기계 평택지회 사무실도 찾았습니다. 불시에 방문하여 요청한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평택지회 김영석 문화부장과 김형철 법규부장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팽성읍 대책위 김지태 위원장, 평택 대책위 강상원 집행위원장 인터뷰

▶먼저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두 분께 감사 드립니다.

(김지태 위원장) 아닙니다. 그간 평통사가 저희 투쟁에 함께 해주신 걸 생각하면...

▶팽성읍 대책위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김) 구성은 올 6월 달에 됐고요, 대책위의 골격이 만들어진 것은 10월입니다.

▶평택대책위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강상원 집행위원장) 2001년도 10월 달,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3,4일 후에 급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평택대책위에는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평택농민회,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책위도 들어와 있나요?

(강) 지금 팽성읍대책위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평택대책위가 먼저 만들어졌고 범국민총궐기대회(10월 31일) 이후에 의견들을 수렴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평택지역의 미군기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팽성 쪽은 현재 미군 영내기지 150만평, 사격장 부지 18만평, 합 168만평 정도를 미군들이 철조망을 쳐놓고 있구요. 지금 밖에 나와서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국유지, 사유지 평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 약 457만평입니다. 흔히 말하는 오산공군기지 217만평, 고덕에 있는 탄약고 73만평, 김지태 위원장님이 계시는 안정리 기지가 150만평, 안정리에 있는 CPX 사격장 18만평, 그러니까 팽성지역만 합치면 170만평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평택미군기지에 신형 패트리어트 부대가 새로 배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 이미 배치가 된 건지,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대에 근무하는 공병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온단다”, “지역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병단 측에서 의심스러운 것은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인지, 활주로 연장하는 척하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대가 새로 배치된 것인지는 확인은 안된다는 거죠.

(김) 패트리어트가 온다고는 하더라구요. 지금 왔다는 건지, 아니면 언제 올 것인지 그러한 정보는 없습니다.

(강) 우리로서는 미군들이 발표한 것 밖에는 모르죠, 실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산기지, 송탄기지를 가보면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철조망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형 패트리어트는 최근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겪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재의 고통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음이지요, 항공기 소음. 그리고 미군들이 영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오기도 하니까, 주민들은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체복 입은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더군다나 외국군이기에 때문에 오는 위화감, 공포감이 있고, 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소통이 안되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초기에는 집단 이주에 따른 시설 미비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원래 쓰던 도로가 미군기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초기에는 기지의 도로를 사용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군들이 철조망으로 막아버려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겪은 피해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도 어려서 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도 벗겨지거나 흙탕물이 장화 위까지 올라오는 일이 많았지요.

지금은, 미군이 소방훈련하면 지역일대가 매연으로 가득 찹니다. 또 우기 때는 미군기지에서 빗물이 한꺼번에 배출이 되어 인근 농경지를 침수시키고 농수로와 구조물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도 전혀 해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팽성미군기지는 언제 조성된 기지인가요?

(김) 미군기지가 조성된 것은 52년이지요, 그 이전 일본군이 주둔할 때는 평수가 상당히 작았는데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기지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 때는 한꺼번에 대규모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할 때 조금 조금씩 확장하니까 별 저항 없이 미군기지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기지보다 더 큰 규모로 확장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로서는 팽성읍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평택에 미군부대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안정리 기지와 송탄 기지, 송탄은 공군부대(K-55)고, 안정리 기지는 정보부대와 육군중심입니다.

미군 비행기 소음문제도 팽성같은 경우에는 헬기, 송탄 경우에는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하죠. 팽성 같은 경우에는 소음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 정도는 아닌데, 송탄 같은 경우는 시내 아파트 위로 전투기가 날라 다니기 때문에 소음정도는 여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곳이 구장포, 황구지리, 금장리라는 마을인데 보통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착륙의 횟수가 약 100회 정도입니다. 시에서도 소음측정을 했는데 약 97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면 아예 주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피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수 차례 정치권에 이야기해 왔지만 완전히 블랙홀이죠.

그리고 비 많이 올 때 시커먼 물이, 항공유가 넘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거든요. 낚시꾼들의 제보로 사진을 찍어놓기도 했는데,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오냐면 그 지역에 '석유다리'라는 지명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9·11테러 직후, 송탄 앞에 쇼핑몰이 있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바리케이트를 쳐 아예 상가 통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소파(SOFA) 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미군들이 자국 군대를 보호한다며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미군 자녀들에 의해서 신발가게 폐장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미군에 넘겨버리고 끝이었어요.

교통사고는 번번이 발생하는 것이구요. 이런 피해들은 이를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택이 군사도시로 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택시에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서해안 시대라고 경제발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발전계획과 군사도시가 과연 어울리는가? 절대 안 어울립니다. 군사도시로 인해 평택시의 경제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은 3개 시·군이 통합된 것이다. 흔히들 송탄에 있는 여자들하고는 결혼도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윤락가들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송탄과 안정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편견이 심합니다.

(김) 어렸을 때 안정리 기지를 지나가다 보면 싸가지 없는 동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안정리 주민들하고 친분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도 안정리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개 시·군이 합쳐졌다고 하는데?

(김) 원래는 옛날 평택군 시절에는 하나였고 시도 없었지요 그때는.

그러다가 평택이 읍이 되고, 송탄도 읍이 되었다가 80년대 초반 평택과 송탄이 5만이 넘어 서면서 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두 개가 시가 되니까 나머지만 평택군으로 남게되어 3개 시·군 지역으로 나뉜 것이죠. 그러다가 90년에 주민투표를 통해 3개 시·군이 통합했습니다. 통합시이기 때문에 시에 면도 있고 리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오산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 오산하고 평택은 틀리지요

▶그럼 왜 공군기지 이름이 오산기지입니까?

(김) 들은 얘기이기만 오산에 유엔군 참전기념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엔군이 많이 죽었

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택에 있는 기지 이름을 오산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전부 부대가 오산에 있는 줄 알고있는데 오산에는 미군기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오산에서 우리에게 항의전화도 많이 옵니다. 문의도 많고 진짜 오산으로 미군기지 오는거냐고.

(강)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오산공군기지가 오산에 있다고 하면 오산이다”라고.(웃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서 언론에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피해상황과 관련해서 미군이나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그전에 보편은 낙하산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낙하하다 보면 미군들이 고추밭이나 농작물 지역으로 떨어져서 피해가 많이 나는데 그 지역은 나름대로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대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가 되면 받는 거고, 다 망쳐놨어도 없으면 그냥 가는거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낙하산 훈련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군 헬기가 건축자재를 들고 가다가 논 가운데에 떨어 뜨렸는데 패인 깊이가 1톤 트럭 하나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120~130만원 받은 것 같은데, 받을 때까지 12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추리 마을의 이장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처리를 하겠다. 1차적인 보상을 이 사람에게 해줘라 이렇게 각서를 하나 써줘서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즉각 해결해 주는 창구를 만들어 놔야 되는 데 시나 의회에 가도 그러한 부서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공무원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경찰로 가야 하는 건지 행정기관으로 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매향리는 소음피해로 아직 최종심은 끝난 것은 아니지만 2심에서 1인당 천만원 정도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평택의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은?

(김) 원래 저희들이 소음 쪽에 주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로 몇 번 왔다갔다 했었죠. 그러는 사이에 기지를 확장한다는 더 큰 문제가 생겨 소음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소음문제를 해소해 주기는커녕 기지를 더 확장한다고 하니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강) 원래 애초 계획은 내년 초쯤에 팽성, 송탄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응은 할 것입니다.

▶지금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평택지역에 용산, 미2사단 이전에 대한 대체부지로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평수 자체도 사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만 근래에 나온 평수가 그 정도라고 하니깐 그렇다치고. 지금 평택시나 팽성읍이나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원천적으로 용산기지건

미2사단이건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지확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소음피해만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여기다 확장을 한다는 것은 심한 말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나지 않더라도 제 발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지로 더는 못 내 줍니다.

▶ 확장 대상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김) 대단하지요. 대상 지역의 여론은 아마 약속도 없이 주민들에게 누가 불쑥 가서 그런 얘기를 물어 보다가는 잘못해서 매맞기 십상일 것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일반 언론에서는 대상지역이라고 하면은 수용지역뿐만 아니라 기지를 끼고 있는 지역, 제3의 지역, 일반 농경지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의견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항상 답이 세가지로 나오는데, 안된다, 된다, 생각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용 예정지라고 하면 결사 반대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 한 평택지역신문 10월 23일자 여론 조사 내용을 보면 전체 평택지역의 53%정도가 미군 기지 평택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시점도 그렇고 설문지뿐만 아니라 전화로 물어보는데 농민들은 대부분은 전화가 오면 바빠서 끊어 버립니다. 시골 사람들은 여론조사 나왔다고 하면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똑같은 제3의 지역 사람들은 와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지확장으로 인해서 상권이 확장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인근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수용지역 농민들 중에서도 토지 소유 문제라든가, 농지전용 문제로 이래저래 매매가 안 되니까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사문제, 자녀문제로 떠나야 할 사람들이 동네마다 몇 집씩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수용에 찬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상금을 더 주지 않을까 하고 반대 데모에도 나와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보상금을 노리고 빈집을 사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죠.

▶ 평택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개발에 도움이 되니까 찬성한다는 여론이나 용산기지가 오는 것은 찬성하지만 미 2사단은 반대한다든가 하는 여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 지금 평택의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라있거든요, 실제 서울의 땅 투기꾼들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팽성, 송탄 근처 주민들은 미군기지가 내려온다고 하면서 땅값이 올라가서 좋긴 좋은데,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가, 지난 번 효순이 미선이 문제를 접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론 조사에 반영 됐다고 보여집니다.

총궐기 준비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대다수의 분들은 미군기지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서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현실이구나, 실제 찬성하는 분들도 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지배층들,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용산기지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이득을 취해야지 무조건 막는 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을 퍼트리니까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되어 용산기지는 별 피해가 없다는데 그런 식이

왜버렸습니다.

▶평택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나요?

(강) 저희들이 시장, 시의장, 국회의원까지 면담을 했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입장은 미군기지가 오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수도 서울에 있는 미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면 원래 미군기지가 있던 평택으로 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식입니다.

앞서 여론 얘기를 했는데, 미군기지 피해를 조금 감수하면 평택이 발전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고속철도 얘기가 나오고 외국대학교 건립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식의 패배의식들이 많습니다.

▶평택시민들의 참가 정도는 어떻습니까?

(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가끔 하는 말인데, 진짜 우리 속담이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남의 염병이 내 고삐만도 못하다”고. 저 역시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솔직히 신경을 안 썼어요. 같은 팽성지역이라도 수용지역 조금만 벗어나면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연세가 70~80세가 넘어 사고날 수 있으니 집회에 나오시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팽성지역에서도 이런데 평택시 쪽으로 나오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쉼기 대회에는 몇 명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강) 팽성읍대책위가 건설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들이 콧방귀도 안 끼었습니다.

팽성 대책위가 출범하고 나서 운동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 졌고, 10월 31일 대회는 내부적으로 두 달 전부터 미리 정해놓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최소 인원 1500명 최대 2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회에는 1500명 정도가 참여 하였다:편집자 주) 주축으로 팽성읍대책위 소속 주민분들, 또 한 축으로는 평택대책위 소속의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준비하니까 되더라구요. 투쟁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쌍용노조는 합법적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만도기계 같은 경우에는 두시간 파업을 지시하고 조합원들이 조퇴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200명 이상 참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대응군으로 역할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동의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일단 저희 평택대책위에서도 미군기지 재배치가 단순하게 대북한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영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같이 연동해서 미군기지 재배치, 국방비 인상, 전쟁무기 배치 등이 총괄적인 문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택이 미군재배치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지역인데,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 주한미군 재배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이복을 상대로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현재까지도 종속적인 관계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지금 죽어가는 호랑이 꼬리 잡는 식이라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미국이 세계의 지배국가로 되겠습니까? 당분간 조금 어렵더라도 미국의 야욕을 꺾어야만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립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진짜 국익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전 국민이 쫓겨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투쟁이 단기간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으로서 각오가 있다면?

(김) 지금 제일 바라는 것은 이 문제가 1대 위원장으로 단기간에 끝났으면 하는데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주위에 친한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힘든 일 남한테 떠넘기지 않고 빨리 좀 끝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각오인데, 빨리 끝나진 않을테고 하여간 내가 변질이 되어서 “저 사람이 변절했구나”, “정치가나 똑 같더라”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강) 저희 대책위 역할과 팽성읍대책위 역할이 조금 틀리거든요. 아까 여론문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군기지의 평택 총집결 문제, 미군 재배치 문제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계획인지를 평택 주민들에게 좀 더 알려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구요.

김지태 위원장님이 초대 위원장으로 간판을 내리지 않도록 최대한 보위하면서 열심히 같이 싸워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성, 시위, 상경 시위 등을 여러 차례 해 왔고요, 그 전에는 땅 한 평 사기운동, 그리고 범국민쫓겨대회 준비해 오셨는데 지금까지 투쟁을 해 오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강) 평통사와 같은 단체가 많아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몸이 앞서지 않는 단체가 많거든요. 특히 평화운동단체들이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무관심이 가장 큰 힘든 것이었습니다.

▶평통사 회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강) 며칠 전에 부천 평통사에서 일요일날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책자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매향리도 직접 보면서, 농섬을 폭격하는 현장을 보면서 투쟁을 했듯이, 회지를 보시는 분들이 올 겨울에 평택 기지에 많이 좀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안내하고 간담회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김영석 문화부장, 김형철 법규부장 인터뷰

▶먼저 만도지부와 평택지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

(김영석, 김형철)정식명칭은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입니다. 만도지부는 산하에 문막, 익산, 평택지회 3개의 지회가 있고 조합원은 약 2500 명입니다. 평택지회 조합원은 900명입니다(조합원들의 근거지가 평택인가요?) 주로 평택인데 수원, 산본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단위사업장에서 경제적 문제 이외의 사안으로 파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경제적 요구사항과 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미군기지 확장반대만을 내걸고 진행되는 파업인지요?

(김영석)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 단독사안이죠.

▶제가 알기로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라는 요구를 가지고 노조에서 파업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석)그런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단련되어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파업이 잦아요. 정치파업도 많이 하고 조합원들이 단련되어 있어요. 집회자리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파업자체에는 참여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번 부분파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김영석)지역에 미군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매항리투쟁 때부터 노동조합에서 적극 결합했어요. 이 땅에서 미군기지를 몰아내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고 지역에서도 매항리라는 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미군문제에 접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매항리와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조합원 일부에서도 미군부대와 관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이 있고 조합에서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조합원도 있는데... 미군기지를 확장할 경우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려냈고, 대추리 주민들이 대책위에 많이 결합해 있는데, 대추리는 미군들이 기지를 넓히고 싶어하는 곳인데요. 미군부대 확장 예정지인 대추리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죠. 백번 선전하고 교육하는 것보다 정말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 그게 부모님, 형제들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사실은 지역에서 하는 큰 집회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느꼈으면 하고 교육도 배치하고 파업하는 것인데... 가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형철)이번 교육은 2시간인데, 하반기 노동정세와 미군기지확장이전 문제를 한시간씩 나눠서 하는데 교육분위기는 여느 교육 분위기와 사뭇 다릅니다. 조합원들은 교육시간을 쉬는 시간 정도로 인식해요. 워낙에 하루 열 시간씩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교육에서는 짝막하게 추모동영상 방영하고 시작하는데 두 시간 동안 교육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조합원들 1/3정도는 조는데 이번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군기지 확장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회에서 발행하는 <현장통신>을 통해 3번 정도 짧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홍보나 교육이 있었습니까 ?

(김영석)매향리부터 지금까지 쪽 이어지는 것 같아요 . 조합원들 중에서도 땅 한 평 사기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저희들은 부안 핵폐기장 문제처럼 지역 전체가 참여하는 투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형철)단순히 미군기지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고, 노동조합에서는 미국에 대한 문제를 선전전도 해왔고 민주노동당에서도 선전물이 나오고 있고 기지대책위에서도 나오고 홍보는 참 많아요.

▶집행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투쟁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

(김형철) 대의원대회가 며칠 전에 있었고 상집 간부들이 인선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작할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정치투쟁이잖아요, 단사에서 정치투쟁하기가 녹 녹치는 않거든요.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합원들의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나쁘지 않으니깐 힘을 받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투쟁 주체로 나서는데 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매향리 투쟁과정에서도 만도지부가 열심히 투쟁하고 조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김영석)그렇죠. 관심 있는 조합원들의 절반정도는 적극 참여하시고 (김형철) 구역별로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참여하고요. 도중에 끝나는 바람에 전 조합원이 다 가지는 못했는데 조합원의 반 정도는 매향리 투쟁에 참여했습니다. 평택지회 조합원은 900명인데 450명 정도가 매향리 투쟁에 동참했었죠.

▶특별히 노동자들이 미국문제, 민족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석)상당히 많은데요.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데서 고통받지 않은 노동자가 없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IMF 때 회사 경영상 문제로 회사가 부도나서 미국계 회사로 넘어갔죠. IMF와 함께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을 반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미국을 반대해왔는데 이를 넘어서서 정치, 군사적으로도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부장님도 말씀해주시죠)조직된 부분이 한총련, 민주노총, 전농인데 앞장서서 끝나갈 수 있는, 조직되고 훈련된 부분이 어디냐, 노동자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미국을 반대하고 신자유주의 분쇄하고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민의 신문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시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53%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블루 칼라, 학생 계층은 6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형철)조합에서 선전 교육했던 활동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대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적어도 노동자, 학생들이라면 80%는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반대가 기대보다 낮은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

(김영석)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데요.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발로 뛰고 교육, 선전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미군기지 이전반대 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중생 촛불시위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군범죄 때문에 미국이 나쁘다는 인식이 평택지역에도 확산되어 있고 수치가 올라간 것 같아요.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면 미군철수하자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조합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철)만도 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미국문제, 민족문제에 대해서 교육선전한 기간이 짧은 반면 이데올로기 교육은 계속 받아왔죠. 그걸 극복해 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부딪친다고 할까? 조합원들이 헛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답이다 하고 명쾌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전선동 프로그램들이 초보 수준에 머물렀고 앞으로는 한 단계 발전해서 교재도 개발하고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맹이나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부탁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영석)단체들의 주의 주장과 조합원들의 정서 사이에 괴리가 많이 있어요. 그 괴리를 없애거나 주의주장이 조합원 정서에 맞게 되어야 하고, 총연맹이나 상급단체는 지역에서 저희가 싸우는 것에 주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상급단체는 지지 지원하는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동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시민사회단체들은 입장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도 있고... 평택처럼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은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반대하는데도 왜 조합이 나서야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조합원도 있는데 미군 철수하자고 주장하면 아직은 조합원 현장 정서와 유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쪽에 교육을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단체들에서 주의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현장조합원들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면 조합 차원에서나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김영석)31일날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결합을 하는데 조합원들이 많이 움직이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알고 내용 전달도 다 됐는데 내 일이다 하는 자발적 참여가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내 일처럼 만들어내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노동자들이 미국,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주체로 앞장서 나가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영석)갑자기 물어보니... 사실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권에 의해 매도당했는데 노동자들이 집단이기주의로 물리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임금, 단위 사업장 내 문제가지고 투쟁해봐야 여러 계층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고립될 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싸워야 한다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평택미군기지 총집결 반대 범국민대회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영석)임금 인상과 단협 투쟁과 맞물리기는 했지만 사실 매향리 투쟁과 경제자유구역 백지화투쟁을 전개하면서 조합원들이 내부적인 사안만 가지고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깔려 있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갈 내부적인 사안만 가지고 싸운다고 지탄받지 않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합원들을 추동해서 그렇게 싸우고 싶다는 바램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이 미군기지 확장이전반대투쟁을 비롯한 반미투쟁에 주체로 나서는데서 집행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미군기지 이전확장 반대 투쟁, 평화군축과 자주통일을 위해,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쪹만도기계 평택지회 조합원은 평택역 앞에서 열린 범국민궐기대회에 250여명 참석했다. 집회에서 만난 김영석 부장은 참여도가 기대치보다 낮다며 “교육과 선전은 열심히 했는데 조직에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는 반성적 평가를 남기고 풍물패 대열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번역글]

세계적인 미군기지 재편은
미군의 '효율화', '분산화', '기동화'가 그 목적이다

이 글은 일본에서 발행되는 좥세카이(世界)좦 2003년 10월호에 실린 '미군의 신세계전략과 오키나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문 번역한 것입니다. 이 글은 주한미군 재배치의 군사적 의도를 잘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키나와의 처지는 우리 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번역했습니다.

- 편집자 주

류쿠신보 워싱턴 주재기자 모리 요헤이

가데나 기지(오키나와 중부에 있는 미군의 공군기지)의 F15 전투기에서의 조명탄 낙하(금년 8월 31일), 월급 지급날 밤 도둑질과 주거침입으로 미군병사 4명이 잇따라 체포됨(금년 8월 15~16일) 등등. 이렇듯 오키나와 신문이 보도하는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는 줄 조짐이 없다. 그러나 오키나와에 대한 도쿄 언론의 관심은 뜸해지고 있다. 미일관계에서도 기지 문제의 비중은 분명히 낮아졌다.

오키나와는 미군의 축소를 바란다. 그렇지만,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거꾸로 기지기능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그 사이에 낀 일본정부는 오키나와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변함없는 오키나와 문제의 구도다.

나는 작년 5월부터 지방 신문인 『류쿠신보』의 워싱턴 주재기자로서 미국방부를 오키나와의 관점으로 취재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오키나와의 언론이 미국의 수도에 기사를 상주시킨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아무리 외쳐도 나아지지 않는 오키나와의 절망감과 폐쇄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미국의 살아있는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조그마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한편, 미국은 올 해 들어 세계규모로 미군기지 재편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기지재배치는 어떤 전략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인가? 그것은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오키나와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워싱턴과 나하(오키나와 현청 소재지)를 잇는 위치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1. 효율화가 미군기지 재편의 첫째 목적

미국이 시작한 기지 재편의 핵심어는 3가지다.

① 미군운용의 '효율화' ② 기지의 '분산화' ③ 부대배치의 '기동화'가 바로 그것이다.

순서에 따라 설명해 보자. 첫 번째 '효율화'인데, 이것을 이해하는데는 린스펠드 미국방장관

의 군사혁신(transformation)의 전체상을 볼 필요가 있다. 2001년 1월 부시정권 출범 후, 럼스펠드 장관은 새로운 위협은 ‘깡패국가’의 미사일 공격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냉전형의 조직과 무기를 대담하게 삭감하려고 시도하였다. 전차를 주력으로 한 육군부대가 경시되고, 특수부대나 공군력의 증강이 강조되고 있다. 또 무인정찰기와 같은 기술혁신을 이용한 새로운 무기가 중요시되었다.

기지에 대해서도, 효율화를 목표로 대담한 축소가 제안되었다. 미 국방부는 2001년 8월 “미국 내 기지는 20~25%나 과잉이다. 특히 도시화한 지역의 기지는 폐쇄를 검토하고 싶다”는 방침을 설명하였다. 기존 기지 통폐합법(BRAC)의 틀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리통합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국 내에서 기지 삭감이 제안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잃을까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의원을 앞세워 그에 강하게 반대하곤 한다. 이번에도 예외로 되지 않았는데 럼스펠드 장관은 ‘혁신’, ‘대테러’를 기치로 이 같은 “저항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있다.

미국 바깥의 기지재편 움직임도, 국내의 BRAC 과정과 연동되어 있다. 특히 유럽 주둔 미군은 소련과의 전투를 염두에 둔 체제로서 독일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도 지상전을 염두에 둔 육군중심의 편성이다. 그것은 벌써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유럽에서 미군기지 재편은 시작되었다. 금년 5월에는 프랑크푸르트에 가까운 기센지구의 보급창, 훈련장, 가족주택의 폐쇄가 발표되었고, 하이델베르크, 블츠부르크 등의 육군부대는 철수, 축소된다. 이러한 부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제국으로 옮겨진다. 나토의 동방확대와 함께 미국의 동맹국이 되고 있는 동유럽제국은 미군 받아들이기에도 적극적이다. 이미 루마니아 등은 이라크 전쟁 때, 자국기지에서부터의 미군기의 발진을 인정하였다.

미군은 미군기지 수용국의 기존 기지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주둔국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2. ‘분산화’는 두 번째 미군기지 재편의 목적

미국 바깥의 기지 재편의 제2 핵심어는, 독일에서 동유럽으로의 이전의 예처럼 ‘분산화’이다. 기지 재편 작업을 추진하는 미 국방부의 안디 호엔 부차관보는 “만약 테러리스트의 훈련시설을 발견해 군사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전개를 위한 시간은) 6개월도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이내에 결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를 위해) 소규모의 미군 부대를 더욱 기동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워싱턴포스트 03년 6월 9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사용에는 선제공격으로 대처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위협에 보다 가까운 장소에 소규모의 전진배치를 해야 한다는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소규모 미군 거점의 네트워크화”—결국은 미군기지의 ‘분산화’—가 필요하다. 때로는, 병참물자를 사전에 집적할 거점만을 확보해 두고, 긴급 시에 미군을 전개할 수 있으면 좋다.

이런 ‘분산화’의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 오키나와 해병대의 오스트레일리아 이전설이다. 금년 5월 29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오키나와에 있는 약 2만 명의 해병대가 5,000명을 남겨두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전한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담당자는 “보도처럼 오키나와 해병대를 대규모로 오스트레일리아로 움직이게 하는 일은 없다.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조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조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나의 느낌으로는 최대 2~3,000명 규모의 일개 대대가 오키나와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순환(rotation)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소규모라도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의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훈련은 증가할 것이다.

일본을 방문한 울포워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6월 3일 주일 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 때 도쿄 출장 중인 나의 질문에 대해, “오키나와현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재편·정리를 행할 생각이다”고 답하였다. 오키나와가 바라는 바대로, 부담이 준다면 기쁘지만, 문제는 부장관의 대답 후반에 있다. “(현 주민의 부담은) 오키나와 만의 특유한 일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란다. 플로리다든, 오클라호마든 또 독일이든 쿠웨이트든, 미군을 받아들이는 어느 곳이나 주민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다. 그리고 미군을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말을 계속하였다.

미군이 있음으로써 안전보장이라는 대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신보수주의자(네오 콘)로서의 부장관의 본심이리라.

미국은 군의 분산화에 의해, 주민에 대한 부담을 세계 각지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동아시아로 말하면, 대 테러 전략 속에서 쟈마 이슬라미어(JI) 등 알 카에다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테러 조직과, 필리핀 국내의 게릴라 조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대만의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필리핀과의 합동 군사 연습의 회수를 늘림으로써, 10년 전에 잃었던 필리핀 기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되찾는 노력을 계속한다. 더욱이, 항공모함들의 항구로서, 싱가포르 해군기지와 베트남의 캄란 만 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고, 타이, 말레이시아에서 거점 확보도 모색 중이다.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덧붙여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군사 관계를 강화하고, 물자의 사전 집적이나 공동연습을 추진한다. 그리고, 일단 뭔가 일어날 경우, 오키나와 해병대와 육군 특수부대(그린 베레)가 급히 달려가, 대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주일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분산화 한 미군거점의 중심(hub)적 기지가 된다. ‘분산화’에 따라 오키나와의 병력 수가 준다하더라도, 사령부나 병참기능은 남는다. 오키나와 주둔 기지의 기능이 높아지는 일은 있지만, 줄 일은 없다.

3. ‘기동화’는 세 번째 미군재배치의 목적

미군 재배치의 마지막 핵심어는 ‘기동화’다. 이것은 이웃나라 한국의 예를 보면 알기 쉽다. 한미 양국은 금년 4월부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라 불리는 교섭을 시작해, 상호방위조약 체결 50주년인 10월 1일까지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전해진 바로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의 3만 7천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축소한다고 한다. 단, 병력 삭감 그 자체는 2차적인 의미밖에 없다. 교섭의 핵심은, 대북한 전문부대인 주한미군의 임무를 글로벌화하고, 기동적으로 지역 내에 전개시키는데 있다.

예를 들면, 스트라이커 부대(SBCT)로 불리는 육군의 긴급전개 부대(신속배치군 : 번역자 주)의 한국 상시주둔 문제다. 이 부대는, 소규모 분쟁이라면 세계 어디나 96시간 이내에 달려가서, 전투에서 평화유지 활동까지 모든 기능을 맡는다. 올해 들어 최초의 여단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신형부대이다.

부대는 전차를 갖지 않고, 막 개발된 최신예 장갑차를 사용한다. 육군의 주력인 M1에이브라함 전차와는 다르다. 이 장갑차는 가볍게 설계되어, C17 수송기에 실어 운반한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육군의 기동화의 상징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부대는 주일 미군과 달리 범용성은 없고, 한반도 이외의 전투에 동원되는 것은 상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를 수 천 규모로 한국에 주둔시켜 오키나와 해병대처럼 지역 안의 긴급 시에 전개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이 스트라이커 부대는 금년 8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 가까이 있는 주한 미군의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8일간 연습을 하였다. 미 서해안 워싱턴 주 포트루이스 기지로부터 온 것은 1개 소대 65명뿐이었지만 최초의 미국의 연습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가까운 장래 상시 주둔의사를 비친 것이다.

인원수도 기간도 제한한 연습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한총련도 연습 중인 미군철수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미군기지 내로 들어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전쟁반대'를 호소하였다. 주한미군의 의미를 밀바탕에서부터 바꾸는 부대가 오자 한국 사람들은 미군기 능 강화의 기운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게다가 한미양국은 현재 DMZ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2사단을 서울 이남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미2 사단은 북한이 DMZ를 따라 배치한 로켓포의 사정권에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참전을 보장하는 '트립 와이어'(인계철선)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은 주한 미군의 유연하고 기동적인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 '트립와이어' 기능을 벗어나 주한미군의 한국 외로의 전개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이다.

4. 세계적 규모의 미군재배치의 또 다른 배경

한 가지 더 세계규모의 미군재편의 배경을 지적하자면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로부터 협력을 거절당하였다. 특히 터키 기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서의 침공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큰 타격이었다. 이라크 전쟁 초기에 미군이 고전한 것도 북쪽에서의 작전이 없는 것을 본 이라크군이 병력을 남부로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가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대치한 냉전 시와 달리 현재의 세계는 복잡하다. NATO에서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까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였다. 이런 세계의 실정에서 하나의 나라에 미군주둔을 집중시키는 것은 미국에게는 위험성이 높다.

미국의 안정된 동아시아 동맹국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미군의 작전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주일미군 기지를 분산시키고 이웃나라 한국에도 기동부대를 주둔시킨다면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유럽의 상황에 비하면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의 분산화 움직임은 둔하다. 워싱턴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잭 스펜서 연구원은

- ① 북한 그리고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대담한 병력 변경이 어렵다.
- ② 내륙부가 깊은 유럽과 달리 항공모함이 해상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전개기지의 분산은 적어도 좋다는 지리적 사정이 있다.
- ③ NATO의 동방확대와 같은 정치·외교상의 요인이 없어 새로이 미군주둔을 받아들이는 나라를 찾기 곤란하다는 특수사정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세계 어디서나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자국 영토로서 장해가 적은 괌과 하와이에 주목한다. 괌에는 동시다발 테러 이후 두 척의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이 새로 배치된 외에, 이후 두 척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하와이는 항공모함의 모항으로 검토되고 있다. 요코스카기지에 추가하는 형태로 하와이에서 항공모함이 오면 서태평양의 미 항공모함은 두 척이 되어 미군의 해군력은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하와이에는 신형전투기와 무인정찰기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미군의 아시아 중시를 말해준다. 규모는 어찌됐든 한국과 오키나와의 병력은 아마 삭감되겠지만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체의 미군 군사력은 증강되는 것이다.

5. 자기 나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일본 정부

미군기지의 세계적인 재편은 미일교섭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일 양국 정부도 올해 3월부터 주일 미군의 병력구성 재검토를 협의하고 있다. 교섭은 ‘디펜스 폴리시 리뷰 이니시어티브(DPRI 방위정책검토협약)’으로 불린다. 럼스펠드 장관이 10월말에 방일하기로 되어 있어 오키나와의 병력‘조정’을 포함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마음에 걸린다. 부시정권이 미군의 재편 또는 미일동맹 강화에 적극적인 것임에 반해 일본의 대응은 여전히 수동적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DPRI는 미국측이 세계전략을 변경해야 할 형편상 열리고 있으며, 일본측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다.

단 명목상의 설명은 다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1996년 4월 미일안보공동선언에 “양국 정부의 필요성을 가장 잘 충족시키도록 방위정책 및 주일미군의 병력구성을 포함하여 군사 태세에 대해서 계속 긴밀히 협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병력구성의 협의는 이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알기 쉽게 바꿔 말하면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해서, 일본은 주일미군 병력구성에 대해서 솔직히 의견을 말하고 상호 의도가 상대국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일은 이후 올해 봄까지 사실상 주일미군의 병력구성에 대해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 오키나와현이 병력삭감의 요구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력구성의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 일본에서 범죄를 일으켰던 미군 용의자의 취조방법을 재검토하는 지위협정 협의에 관해 언급하고 싶다. 협의는, 오키나와현의 긴다케초에서 금년 5월에 일어난 해병대원의 강간치상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미국측은 “기소 전의 신병인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취조 때 미국 당국자의 입회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뤄진 협의에서 일본측은 “미군만을 특별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본 법무성과 경찰청의 반대를 누르고, 한정된 형태로 입회를 인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일은 세부적인 면에서 절충하지 못해 교섭은 중단되었다.

내 자신 이 문제를 취재했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측의 요구에 우왕좌왕하는 일본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미국측 주장은 부당하다”는 논조도 있었다. 다만 대응 감옥 등 불투명함이 많은 일본의 형사제도 전체가 바뀐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에 대응할 뿐으로, 일본측이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 점은 불만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취조에 미국 당국자 입회가 인정된다면 미국 측의 수사에도 일본 당국자의 입회가 용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년에 있었던 한국의 여중생 압사사건에서는 공무 중을 이유로 미군이 재판권을 갖고 미군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오키나와에서도 1974년 풀베기를 위해 사격 및 폭격장에 들어간 현지 사람이 미군에 의해 저격된 시에지마 사건이 있는데 일본이 재판권을 주장하였지만 미국 측은 공무 중을 이유로 신병인도를 거부하여, 미국측이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런 예처럼 미군이 수사, 재판을 하는 사건이라도 주둔국(결국 일본이나 한국)의 관심이 강한 예는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미군수사에도 일본경찰의 입회가 용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미일소과 협의에서 일본측이 이런 정당한 요구를 한 흔적은 없다. 일본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국익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에 농락 당하지 않으려면 오키나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오키나와 기지문제에 대한 절망감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 오키나와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일본정부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기지문제의 책임은 중앙 정부에게 있고 현은 정부를 통해 요구한다”라는 이나미네게이치(오키나와 현 지사 이름) 정부의 입장도 최종적인 문제해결을 중앙 정부에 맡긴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나미네 현정부의 입장도 조금 변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지의 해병대 이전 보도 때, 현의 담당자는 미국방부까지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지사는, 미군기지가 있는 자치단체를 찾아다니며 요청하는 ‘전국행동 PLAN’을 실행 중인데, 현의 부지사를 포함하여 방문한 도도현(都道縣 : 일본 광역행정 구역)이 열 한 곳을 헤아린다. 중앙정부에 대한 의지 일변도 자세가 바뀐 것이다.

단 중도반단의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방부에 대한 문의라 하더라도 전화한 곳은 보도부로 정책결정자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워싱턴에 현 사무소를 두는 등 인맥 만 들거나 정보 수집 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류쿠신보’의 사설(금년 6월 2일 조간)은 “주둔미군의 삭감과 대폭적인 기지반환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현 주민이 어느 정도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썼다. 사설이 말하는 대로 문제는 현 당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 ‘류쿠신보’의 기자들은 작년부터 독일, 한국, 미국 그리고 카리브해의 비에케스 등 미군 기지 문제로 똑같이 시달리는 곳으로 날아가 취재하고 바깥에서 오키나와를 객관화하고자 하였다(취재성과는 NHK출판 『르포 군사와 싸우는 주민들—일본·해외의 현장에서』, 류쿠신보사편을 참조). 오키나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는 언론으로서의 하나의 방책인 셈이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전략을 위해 세계 군사기지를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에 농락 당하지 않고 평화의 섬 오키나와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오키나와 자신이 전략을 단련해 대항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커다란 전환점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오키나와가 세계를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시론]

노무현 정권 1년을 돌아본다: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정치학/평화학 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 대표 이재봉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든 자주국가든 환상에 불과할테니, 북한에 대한 전쟁 불사와 한미 공조를 외치는 극우 호전적인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그를 지지할 듯한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과 시민운동가들 100여명에게도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며칠 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축하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대는 당선 직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대표들에게 “촛불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여중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살인자들은 무죄로 풀려났는데도, 그에 대한 진지한 사과마저 없는데도, 그리고 한 두 명이 아닌 수 만 명이 모이면 이른바 군중심리라는 게 작용할텐데도 비인간적일 정도로 냉정을 유지하며 절제된 촛불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도, 어떻게 더 이상 자제하란 말인가.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미국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취임 후 미국에 대한 그의 태도나 정책은 더욱 실망스러웠다. 대통령 후보 시절 보여준 미국에 대한 당당한 모습은 찾기 어려워진 것이다. 취임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가운데 아마 가장 명분이 없고 추악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자고 한 것이다. 원칙과 소신의 ‘노짱’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니 벌써 변질하게 되는구나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

나아가 그로부터 두어 달 뒤 그가 미국을 방문하여 보여준 언행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사진 찍으러 미국 가지 않겠다”며 미국에 굽실거리지 않는 자주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은 조금 “오버”했노라고 둘러대고, 남들은 “굴욕적 사대 외교”라고 점잖게 비판했지만 나에게겐 “아침과 비굴”로 보일 뿐이었다. 물론 촌사람이 외교 경험도 별로 없는 터에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 갔는데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이 붕 띄워주니 뽕 가버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몽개며 낮뜨겁게 아침했다. “만약 53년 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그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관한 미국의 역할을 모르고 이 말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너무 무식하다고 할 수 있고, 알고도 그랬다면 천하의 아침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은 분단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분단의 원흉이 바로 미국 아닌가. 미국이 전쟁을 통해 남한을 도와준 은혜에 감사하려면 분단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유엔 내의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온 세계를 향해 자신이 이미 ‘부시의 개’가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정당성이라곤 반쯤 어치도 찾기 어려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왜 반대했느냐며 앞으로는 미국이 하는 일에 시비 걸지 말라는 투였다. 이걸 해도 너무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알밋다는 말도 있는데, 미국의 위세에 빌붙어 간죽거리는 남한이 국제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는가.

그는 국익을 위해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는 뜻의 말을 했다. 미국에 가서 어떻게 반미적 언행을 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맞다. 국익을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라와 민족의 체면과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 또한 국익을 위해서는 친미도 필요하고 반미도 필요하며, 줄기찬 반미가 바람직하지 않듯이 무조건 친미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비판은 반미가 아니듯이 비굴한 아첨은 친미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 친미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반미도 하면서 국익을 챙기려면 먼저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노대통령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했다고 하지만, 비굴과 아첨은 겸손이나 미덕과 달리 조소와 경멸의 대상일 뿐이다. 그의 비굴과 아첨에 미국인들이 걸으려는 반미주의자가 아니라며 반가워했을지라도 속으로는 “네까짓게 그러면 그렇지” 하지 않았을지 궁금하다.

한편 2003년 10월, 평양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한다는 학자들과 남북 관계 및 세계 정세에 관해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다. 주제를 북한 핵문제로 바꾸자 그들은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바깥에서는 북한의 대응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비난하지만, 자신들은 미국과 남한의 속셈을 몰라 대응을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베이징에서 평양의 학자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또 남한의 대북 정책에 관해 물어보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평양에서나 베이징에서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자신 있게 몇 마디 해주었지만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밖에 할 수 없었다.

남북 관계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묶여 있다. 그런데 핵문제는 근원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다. 이른바 1993~1994년의 제 1차 핵위기에 이어 2002~2003년의 제2차 핵위기는 부시 행정부가 1994년의 제네바 합의를 무시하고 줄기차게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중재자 역할을 잘 하면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맡고 있는 중재자 역할이라는 게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미국을 추종하는 것 밖에 더 있는가? 남한이 핵문제를 푸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중재자 역할마저 할 수 없는 배경이다.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3자 회담’에 남한이 끼지 못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에게 가장 큰 후원자다. 북한이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대주고 식량도 엄청나게 퍼준다(?). 미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면 거

부권을 행사하며 막는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견제하며 미국을 편든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소신껏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은? 북한에 에너지를 보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도 미국의 반대로 보내지 못했다. 남북 사이에 돈 한 푼 들지 않는 종이 쪽지 한 장에 불과한 평화 선언조차 미국의 반대로 못했다.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거침없이 얘기하면서도, 미국에게는 북한의 불가침조약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면 침묵을 지키면서도, 북한이 그에 맞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별때같이 일어나 흥분한다. 이렇듯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미국에 추종하기만 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떻게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음흉한 속셈과 노골적인 압력에 의해 미제 미사일 구입을 비롯한 군비 증강을 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주한미군을 후방으로 빼거나 줄이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따라 남한이 자주 국방을 핑계로 군사비를 늘린다는 게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인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에서 해마다 줄이느라 2003년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2.7%에 ‘불과한’ 국방비를 김영삼 정부 때의 수준인 3.2%로 “회복”시킨다니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2003년 6월 초 서울에 들러 남한이 국방비를 늘릴 것을 주문하자 남한 국무총리가 기다렸다는 듯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6월 중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군비 증강 요구가 나온 뒤에 남한 대통령이 그에 화답하듯 “앞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은 도저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도 남한은 북한보다 국방비를 최소한 3~4배 더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남한은 줏대 없이 미국을 맹종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게 아니라, 미국에게는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줄이며 뒤로 물러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사업평가]

2003년 평화군축운동 평가와 과제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유영재

들어가며

평통사는 지난 6월 재창립과 함께 평화군축운동을 중점사업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평화군축팀을 신설하여 사업체계를 갖추고 그 동안 국방비증액 반대와 무기도입 저지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평화군축팀은 올해의 목표로 “2004년도 국방예산 GDP 대비 3%증액 저지”로 잡고, 그 방향으로 ‘예산 편성 전과정의 일정을 추적하여 대상에 따른 실천을 조직한다.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적 활동과 대중적 실천을 병행한다. (MD)무기도입 저지사업과 긴밀히 결합한다.’ 등을 설정하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목표와 방향에서 벌인 평화군축운동을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이후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활동평가

1. 내용에 대한 평가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의 내용은 평통사의 기획예산처 제출 문건(7/28), “‘자주국방’과 2004년도 국방예산 토론회” 토론문(9/3), 「평화누리 통일누리」 9월호 특집, 캠페인 홍보물(9/20), 국방위원 및 예결위원 서한(10/24), F-15K 예산삭감 국회 청원(10/22) 등을 통하여 제시되었다. 국방비증액 반대의 내용을 다음의 세 부분으로 정리해 본다.

1)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의 의의를 자주, 평화, 복지 실현으로 제시함

재창립 평통사가 출범하고 평화군축운동을 중점사업의 하나로 설정하면서 회원들 사이에 왜 평화군축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중점사업으로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평화군축운동의 의의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내용을 준비하고 가다듬는 과정에서 국방비증액 반대운동 나아가 평화군축운동의 의의를 자주, 평화, 복지의 실현이라는 것으로 요약하게 되었다.

자주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국방비증액과 무기도입이 미국의 요구와 압력에 따른 것으로서 그로 인한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막고 자주권 확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방비증액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는 주로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개념이다. 국방비 대폭 증액과 첨단무기의 대거 도입은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게 된다. 이를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증액과 무기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는 경제, 민생의 측면에서 제시되는 개념이다. 제한된 국가예산에서 비생산적 분야인 국방비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 민생, 복지관련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복지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것은 민생복지 향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리가 이후 실천과 토론 과정에서 보완·검증되고 풍부화되며, 우리 고유의 평화군축운동론 정립의 토대가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국방부의 국방비증액 논리에 대한 반박

국방부와 군관계자들은 ‘자주국방론’, ‘북한위협론’,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위협론’, ‘GDP대비 국방비증액론’, ‘장병 사기복지증진론’ 등의 논리를 동원하여 국방비증액을 전방위적으로 선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기회를 통하여 조목조목 국방부의 논리를 반박하였다. 국방부와 우리 사이에 쟁점이 형성되었고, 최소한 논리 자체에서는 밀리지 않았다고 본다. 문제는 인적, 물적 자원의 규모에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현저한 차이-마치 육성과 고성능 앰프의 대결처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가 충분히 전파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군 관계자들은 그것 자체로는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장병의 열악한 주거생활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국회 국방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부분에서는 국방비 증액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있게 다듬는 문제와 함께,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에게 더욱 설득력있게 우리의 논리를 전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항목별 삭감 요구 제시

우리는 전력투자비 분야와 경상운영비 분야에서 40여 개에 이르는 항목에 대하여 삭감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국방예산 각목명세서를 열람하여 문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삭감 액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보와 자료가 지극히 제한된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제기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당위적 수준에 머무른 것이어서 자료적 가치도 크지 않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다. 또한 우리의 제한된 정보와 역량과 경험으로는 문제가 되는 항목 전체에 대한 구체적 삭감 액수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각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필요한 것은 첫째, 핵심적 항목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어디에 내놓더라도 활용 가치가 있는 내용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창립 이전의 평통사가 F-15K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이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집중적인 자료조사를 통하여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생산한 것은 제한된 역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후 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례라고 하겠다.

둘째,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한 삭감 요구액을 산출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방비 삭감 요구총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체 국방예산에서 삭감 규모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대

중적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분석능력을 높이는 등 좀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방비 삭감 요구액은 현실성을 갖는 당면 목표로서 차기 연도 삭감 요구액과, 중장기적 목표로서 평화군축의 관점에서 본 적정 국방비에 따른 삭감 요구액으로 나누어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평가

1) 대 정부·국회 활동

국방부에 대한 대응은 평화군축팀 활동이 평통사 재창립 이후에 시작된 관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방예산 관련 기관 즉,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회와 정당 등에 대한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전의 국방부와 국회 중심의 제한적 활동에 비해 활동 대상 기관이 확대된 것이다.

그리고 활동 방법도 관계자 면담(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김성식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이윤수 국회 예결위원장),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서한전달, 방송 및 국회 토론회, 서명용지 전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이 특정시기의 활동이 아니라 연중활동으로 전환되었고, 대상 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밀착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로이 활동 영역을 개척하다보니 국방비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기관, 어느 부서의 누구와 만나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유기적 결합 등 더욱 효과적인 활동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2) 대중사업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꾸어주기’ 행사가 평통사 재창립 이전부터 추진되어 서울, 부천, 인천, 전북, 충청 등 각 지역에서 모두 10여 차례 실시되었다. 이 행사는 어린이와 부모들의 일정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시기와 맞물려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 이 행사는 가장 낮은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 반대의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반대 캠페인이 서울, 부천, 인천, 전북, 충남지역에서 총 20여 차례 진행되었다. 이 캠페인에서는 2만 부의 국방비 증액반대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약 5천 명의 서명도 받았다.

네티즌 60% 이상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고 시작한 캠페인이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대중의 반응은 매우 냉담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홍보 유인물과 전시물을 정성 들여 만들어 그나마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캠페인의 효율성은 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원인은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명운동을 중도에 중단한 것에서도 보듯이 주체적 요인에 있다기 보다는 객관적 조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캠페인 주제 선정 등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방비 증액반대 선언광고 및 기자회견이 추진되었다. 당초 계획은 각계를 대표하는 300여 명이 참여하여 국방비 증액반대의 여론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었지만,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가 불거지는 등 각종 사회현안이 대두하면서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라크 파병반대

내용을 결합하고 평통사 회원까지 선언 대상을 확대하여 400여명의 서명을 어렵게 조직하였다. 계획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안겨준 사업이었다.

당초 국방비증액반대운동의 방향 중 하나였던 ‘(MD)무기도입저지사업과의 긴밀한 결합’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F-15K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진 못했더라도 일찍부터 KMH와 같은 사업을 발굴하여 대중사업에 결합했다면 조금이라도 대중의 반응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3. 연대활동에 대한 평가

우리는 기획예산처 대응에서부터 관련단체들에게 실천에 실질적으로 결합한다는 전제 위에 각자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연대활동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최대 8개 단체가 각자가 책임질 수 있는 수준과 범위에서 연대활동에 동참하였다. 이와 같은 유연한 연대활동 방침으로 인해 각기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 공동투쟁을 하면서도 불필요한 잡음과 소모를 줄일 수 있었고, 효율적인 연대가 가능하였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 보내는 서한은 평통사와 참여연대가 각자 작성한 문건을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도 높은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었다.

평화군축운동 단체가 많지 않고, 그 경험이 일천한 우리 운동 현실에서 이와 같은 연대활동의 경험은 의미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총평 및 과제

올 해는 한마디로 본격적인 국방비 증액반대운동 전개를 위한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평화군축팀을 구성함으로써 담당 체계를 세웠다는 점,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 국방비증액반대운동을 연중활동으로 전환했다는 점, 일상적 연대활동의 틀을 닦았다는 점 등이 그 근거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였는데, 운동진영으로부터 국방비증액반대운동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 기관에서는 평통사라는 단체가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끔 하였다.

그 동안의 활동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제한된 역량으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 전문역량을 확보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문제, 국방비증액 반대운동을 대중화하는 문제, 연대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안정화하는 문제 등을 과제로 안게 되었다. 아울러 국방비증액 반대와 무기도입저지운동을 실천적 고리로 투쟁을 시작했지만 한반도 평화군축 방안과 평화체제 수립 방안 등 한반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함께 제시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특집2]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 공청회 지상중계

지난 10월 15일 “한미관계의 발전적 대안모색과 ‘신한미상호방위조약(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평통사 등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김승국 박사가 신 조약(안)에 관해 발제를 했고 최철영 교수, 서보혁 박사,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된 내용을 발췌하여 실습니다. 신 조약(안)은 본지 2003년 9월 호에 실려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최철영 대구대학 교수 토론문(요약, 발췌)

이번에 평통사에서 발표한 신 조약(안)은 이전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현실을 감안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현행 조약은 심각한 문제점 때문에 존속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현행 조약의 전면 폐지를 논의하기에는 남북간 평화공조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심화, 시민의식의 성숙, 군사주권회복으로서의 자주국방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서 현행 조약이 체결된 50년대와는 달라진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여, 현 조약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신 조약(안)을 제시하는 것은 타협이라기보다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1. 조약 전문

현행 조약의 목적은 ‘잠재적 침략자’라는 표현에서 알수 있듯이 과거 공산 진영의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위에 있다. 그러나 1953년 조약 체결당시와는 냉전 종식, 남북관계의 변화 등 시대상황이 달라졌다.

따라서 신 조약(안)의 전문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결 해소 및 공동번영 추구’를 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맞추어 당사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이익을 적절한 방법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제1조 - 대등한 한미관계의 선언

현행 조약 제1조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 조약(안)의 제1조는 상호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이나 호주 등과 체결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의 경우 무력사용의 기준·원칙으로서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약은 제1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 조약의 형식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신 조약 안은 이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지주장의 근거가 되어왔던 수직적 한미관계를 벗어나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3. 제2조 -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모색

현행 조약 제2조는 당사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은 경우 협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한반도 내에 무력증강을 금지하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방위조약이 정전협정과 정합성을 갖추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사대결 종식과 군비축소에 합의해야 한다.

신 조약(안) 제2조는 이를 반영하여 '한반도 군비축소'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능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한미 양 당사국이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사이의 합의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한 남북간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우선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2조는 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의정서의 내용이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4. 제3조 - 침략전쟁의 반대

신 조약(안) 제3조는 '모든 침략적 무력공격에 반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국제연합의 원칙을 확인하는 한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에 대해 침략적 무력공격반대 및 침략적 무력공격으로 인한 사태에 대한 불개입을 선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3조의 '국제연합의 헌장'이라는 표현은 신 조약 안 전문의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의 준수'와 중복되므로 신 조약(안) 제3조의 '쌍방은 모든 침략적인 무력공격을 반대하며' 다음 부분을 삭제하고 신 조약(안) 제5조와 통합하면 제3조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침략적 주권침해 행위'를-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침략이 군사적 방법을 통한 침략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반대하는 규정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5. 제4조 -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절차

신 조약(안)의 제4조는 상호방위조약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협의 및 상호합의에 의한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조약 제3조의 절차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의한 한반도 방위지원과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보장이라는 쌍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다. 그런데 신 조약(안)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에 대한 공격'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공간적 발동요건을 제한하는 경우 동 조약의 '상호성'이 현격하게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6. 제6조 - 주한미군의 주둔

신 조약(안) 제6조는 현행 조약 제4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행 조약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 비해 신 조약(안)은 주한 미군 주둔 목적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고 명시함으로써 이와 배치되는 미군주둔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조약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미국이 수락(accept)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나 신 조약(안) 제6조가 미군의 남한 내 시설 및 구역사용 허가를 규정함으로써

써 현행 조약이 갖고 있는 위헌적 영토주권이양 사항을 교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주한미군의 시설구역 사용 및 군사력 배비에 있어 남한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한미관계의 수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7. 제8조 - 조약의 유효기간

현행조약은 조약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범규범은 정의를 목적으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한미간의 범규범 또한 남한과 미국이 동 조약을 통해 상호 교환하는 안보와 자율성간의 형평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으로서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조약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도록 한 것은 역시 동 조약의 평등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8. 부칙 - 한미군사동맹체제의 재정비

신 조약(안)의 부칙은 현행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뿐만 아니라 현행 조약에 따라 체결된 각종 한미간의 합의를 신 조약(안)에 맞도록 개폐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한미동맹체제가 한미간의 수평성과 호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서보혁 박사 토론문

평통사 등이 제시한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의 취지와 제정 원칙 등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한다.

첫째, 신 조약(안)은 한미 양국의 전통적인 군사동맹에 있어 불평등한 요소를 수정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다만, 신 조약 (안)이 한미간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양국관계를 상호 호혜, 우호협력 등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조약의 명칭은 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상호방위 및 우호친선 조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둘째, 신 조약(안) 제4조에 제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역 및 관할 지역에 대한 침략 또는 무력공격”에 대한 지리적 범위는 남한에 대한 안보로 한정됨으로써 상호방위가 한정적이고, 탈냉전 이후 비전통적(unconventional)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협력과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안보협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 신조약(안)이 전문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호혜적인 한미 군사관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제5조 침략전쟁에 대한 방어적 무력행사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구

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호함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연합의 침략전쟁 규정을 준용하거나 ‘명백하고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 조약(안)이 불평등한 동맹관계 청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할 때 미군의 남한 주둔 규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약에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하는 경우 주둔하도록 할 수 있다는 표현을 ‘필요시 양국 행정부가 협의할 수 있으며 양국 국회의 비준(혹은 국민투표)으로 결정한다’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수정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현행 조약은 군사주권의 확보를 통한 평등한 한미 군사관계, 남북통일 지향, 지역평화를 위한 역내 공동협력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신 조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토론문(녹취)

신 조약(안) 제 1조를 보면 상호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이것은 유엔헌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입니다. 제1조에서는 새로운 21세기 한미관계의 변화,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미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구로 대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신 조약(안) 제 2조는 군비축소를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고 했는데, 중국과 일본, 러시아는 군비증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군비축소를 한다, 차라리 군비통제, 군사신뢰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신 조약(안) 제 3조를 보면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어떤 분쟁에 대해서도 무력대응을 하지 말자는 얘긴데, 한미동맹조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동맹조약 자체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낡겠죠.

신 조약(안) 제 4조를 보면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와 헌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미국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애매 모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조약(안) 제 6조를 보면 아직도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이렇게 바꾸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이동, 반출, 연습, 작전 변경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서 상당히 잘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문 (녹취)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급속히 변했는데 한미동맹의 기존 조약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북간의 교류가 일어나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휴전선의 북한의 군대가 없어졌습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바라본다면 한쪽에서는 변화가 있지만, 다른 쪽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은 동맹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실제로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족관계의 특수성을 얘기하면 한쪽은 포기해야 됩니다.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주적 개념을 미국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동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각 토론자의 답변

* 최철영 교수

저는 기본적으로 신조약(안)에 대해서 찬성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정전협정과 함께 한국전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현실상황은 변화한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여전히 한반도의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약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 정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지향점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이 이러니까 이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보수입니다. 또 현재 미국이 세계 군사비에서 52%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상은 현실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이상을 추구하는 현실이어야 하지 단순히 과거를 반영해 주기 위한 현실을 계속 주장해서는 지금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결국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태효 외교안보연구원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질문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역할 조정이 한미간의 현행 안보조약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신 조약이나 조약의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만약에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하고 한미 정부 차원의 합의가 있다면 동북아지역으로 확장하는 조약이 새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아까 보수주의라고 비판하셨는데 보수주의라는 것은 현실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고, 진보주의는 현실에 부당한 면이 많으니까 기본적인 틀을 급진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굳이 부친다면 중도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굳이 문건을 갖고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로 북한이 더 위반해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양쪽이 지켜야하므로 그러한 논리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조약의 수정을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군이 한국에 중요한 무기체계를 가져온다든지 배치를 달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와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너무 굴욕적인 표현을 고치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해야 합니다. 제한을 가하더라도 재량권을 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죠.

한미동맹의 장래에 대해서는 국방연구원에서 이미 답을 내 놓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에서부터 앞으로 가치 공유적 동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북한만을 겨냥한 동맹에서부터 인류와 함께 평화를 나누는 동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미국 일방주의적 동맹에서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가야한다. 넷째, 한국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보혁 박사

김태우, 김태효 두 분은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의 폐지 내지는 급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현 상태에서는 양국간의 군사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사실 한미동맹관계는 양국 간의 내부적인 요소, 양국 간의 이해 관계, 주변의 상황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신 조약(안)이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것이 옳은 자세이며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안을 마련할 때 참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서보혁 박사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5차회의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자 미국은 현재의 한미동맹 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여 우리 정부가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시민사회와 적극 의견을 나눔으로써 국가이익을 재고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우 국방연구원

지금 주한미군이 감축이 되면 됐지 역할이 증대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140만이라고 하는 한정된 군대로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되고, 게다가 미군은 죽으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려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 방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미동맹의 방향은 잡혀있습니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없어지고 나면 더욱 광범위한 가치공유적 동맹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역을 벗어나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비약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우입니다.

*김태호 외교안보연구원

어떤 준비를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안이 내부적으로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에 대해서 이런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파병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한미간에 보다 철저한 신뢰공조가 회복되기 전에는 이런 신 조약 문건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철영 교수

신 조약(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안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고쳐라 했지만, 이걸 이렇고 저런 저렇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상황입니다. 새로이 제시된 이 안을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이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사회에서 정책의 변화, 결정권자의 결심 변화는 국민의 여론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역사적인 자리로 자리매김 됐으면 합니다.

[방북기]

평양에 다녀와서

대전충남 평통사 상임대표 김 홍 수

지난 9월 25일 저녁 대전충남 평통사 창립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새벽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여덟 명으로 구성된 감리교회 평양 방문단에 속해 평양에 도착한 것은 9월 27일이었다. 평양이 처음 온 길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내 조국, 내 동포들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했다.

며칠 동안 지나다닌 평양의 풍경은 수많은 아파트와 각종 구호, 인적 드문 거리가 결합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 간판과 구호를 유심히 보았다. “남새상점”, “짜장면집”, “팔골 식료품상점”, “칠골 조선옷집” 등 상점 이름이 정겨웠다. 여기저기 걸린 구호는 낯설었다. “살아도 죽어도 붉은 기”, “우리 장군님과 끝까지 뜻을 같이하자”,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같은 구호들에서 시련 속에서도 북한의 지도부와 함께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려는 북한 사람들의 견고한 결의 같은 것을 느꼈다.

아침 일찍 호텔 문을 나서 날마다 대동강변을 산책했다. 강은 깨끗하고 물은 곱게 흘렀다. 저 멀리 강 한쪽에 북한인민들에게 역사를 상기시키는 푸에블로호가 전시되고 있었다. 평양에서 묘향산 가는 길은 느낌이 달랐다. 길 양쪽에 만발한 코스모스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 주었다. 차량이 없는 도로에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속도로변 밭에서는 콩과 수수가 햇볕에 잘 익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수수밭을 보기는 어릴 때 이후 처음이었다. 북한에서 수수는 약재로도 쓰인단다. 추수가 시작되어 눈에는 농부들과 소들이 일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니 1960년대 산업화되기 전의 남쪽사회가 떠올랐다.

우리의 방문은 남북 종교 교류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북에 머무는 4박 5일 동안 북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교회와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하고 북의 교회 대표들과 종교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봉수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다. 연로한 여성 운영덕 장로는 이웃사랑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심령의 눈을 밝혀줄 것을 간구했다. 남의 형제들을 볼 때마다 통일을 갈망하게 된다면서 민족분단의 수난의 역사를 끝내달라고, 우리 힘으로 통일하게 해달라고, 천하강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다. 그는 또 남북 종교인들의 상호방문이 통일로 이어지기를 빌었다. 봉수교회 담임목사 손효순은 ‘믿음과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변절이 최악의 배신행위라고 역설했다. 1988년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일부 남쪽 사람들은 가짜교회라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봉수교회에 대한 모독인 셈이다. 예배 후에 교인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칠골교회로 떠났다. 칠골교회의 주일예배는 끝났지만, 황민우 목사와 신자 몇 사람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교회현황과 역사를 들려주었다. 이 자리에 김일성 주석

의 어머니 강반석이 다닌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1992년 12월 28일 헌당식을 가졌는데 교인은 100명이라고 했다.

북한에는 교회 외에도 가정교회라 불리는 신앙공동체도 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인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가정교회라 부른다. 수요일 오전에 우리는 낙랑구역 충성1동 한 아파트에 있는 가정교회를 방문했다. 아파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10여 명의 신자들이 우리를 환영했다. 여기서도 손풍금에 맞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다. 평양에는 2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다고 했다. 조문봉 집사가 이 가정교회의 책임자라고 했다. 6·25 때 교회가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되고 나서 탈교회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가정교회 가까운 곳에 평양 봉수 국수공장이 있었다. 미국 장로교회가 지어준 공장이다. 봉수교회가 운영하는데 사회봉사 차원에서 국수를 만들어 양로원과 고아원에 나누어준다고 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정치활동만 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및 남한교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게 되자 사회봉사 선교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정치에서 경제로 교회의 관심이 바뀐 셈이다.

이번 평양 방문 중 나에게 가장 뜻 깊은 것은 평양신학원 방문이었다. 이북의 신학도들에게 한 시간 동안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봉수교회 옆 건물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건물이 있고 신학원은 2층에 있었다.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신학교육 기관이다. 학생 10여명이 강의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신의주, 원산 등지에서 온 학생도 있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전후로 보였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장차 이들이 교회와 민족의 큰 일꾼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들에게 남쪽에서 우리나라 교회사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면서 이번 강의가 장차 그들이 해방 후의 북한 교회사를 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제식민지 시기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항일운동에 많이 나섰다는 점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 지난 해 감리교 신학대학의 김득중 총장도 특강을 했다고 했다. 남쪽 신학자로는 내가 두 번째 강사라고 했다. 평양신학원은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문을 닫았다가 2000년 9월 다시 문을 열었다. 감리교회는 3년 동안 매년 20만 불씩 신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리교 신학자들에게만 강의를 부탁하는 것은 신학교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것이다. 신학교육을 위해 내가 봉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마련한 노트북 컴퓨터를 전달했다. 남북 종교교류의 한 단면이다.

이번 평양방문 때 필자와 류대영 교수가 같이 지은 『북한종교의 새로운 이해』(2002)를 한권 가지고 갔다. 이 책에 황장엽의 글을 몇 군데서 인용했다. 평양의 한 교회 간부는 이 내용을 보고는 북쪽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읽히려면 북을 배반한 황장엽 같은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책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남과 북 양쪽의 독자를 상대로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날, 북한교회를 이끌고 있는 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는 북의 현실에 대해서 이해를 넓힌 방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70이 넘었다. 그리스도교연맹 선교부장은 북이 주체사상을 선호하는 사회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기독교 선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들었다.

[자료실]

2004년도 F-15K 도입 예산 삭감 국회 청원서
소 개 의 건

F-X사업은 한국공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기 국책사업의 하나임. 작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과정에서 빚어진 공정성 시비와 미국의 외압설 등 무기구매사업에 있어 경쟁업체국은 물론 국민들에게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장기적인 우리군의 현대화 작업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차기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평가가 투명하지 못했다, 국방부가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절충교역 위반 등 보잉사의 일방적인 계약위반 등의 횡포는 F-15K 도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내년 예산에 국방부는 F-15K 도입과 관련해 예산 7,474억7,120만5천원을 책정하였음. 이는 국방예산 총 증액분의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 때문에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감사원의 주의조치로 모든 것이 간단히 해결되었다는 듯 F-15K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짐.

국방부도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금품 제공이나 불법로비 행위가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F-X 사업 입찰 업체들과 체결하였던 만큼 F-X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우리의 국방현대화를 위한 장기사업인 만큼 F-15K 도입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구입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됨. 내년 F-15K 도입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청한 본 청원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개하는 바임.

김 원 응 의원

청 원 서

1. 제 목

2004년도 국방부 F-15K 도입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촉구 청원

2. 취지

차기전투기(F-X) 사업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하였다’,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불철저하다’, ‘엔진 구매계약이 원가보다 높게 이뤄졌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솔하게 제기된 국민적 의혹에 비추어 보면 병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지만 F-15K 도입을 둘러싼 온갖 국민적 의혹들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특히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F-X 사업 평가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

못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F-15K 도입에 5조 5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소요되고 또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던 국민적 의혹이 아직도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F-X 사업에 대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F-15K 도입 사업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해 줍니다. 더구나 보잉사가 본 계약 체결 뒤 절충교역 등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김으로써 국민 혈세의 낭비는 물론 막대한 국익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보잉사와의 계약이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F-15K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온갖 의혹 속에서 강행된 F-15K 도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우선 2004년 F-15K 관련 예산 7,474억 7,120만 5천 원(그 중 외자가 5억 111만 달러)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도 “평가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수차에 걸쳐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또 “금품 제공이나 불법로비 행위가 밝혀지면 사후에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F-X 사업 입찰 업체들과 체결하였던 만큼 이 같은 예산 전액 삭감은 합법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갖습니다.

내년도 F-15K 도입비는 내년 국방예산 총 증액분 약 1조 4천억 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를 삭감한다면 우리 국민의 부담도 줄고 어려운 나라 살림도 숨통을 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F-15K 예산이 그대로 승인된다면 막대한 국익 손실과 국민 혈세의 낭비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내년도 F-15K 도입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청 드리며 이를 청원합니다.

3. 청원내용

■ F-15K 도입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할 이유

(1) 차기전투기(F-X) 사업 평가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F-X 사업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8월 17일 이성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F-X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중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그 근거의 하나로써 국방부가 제안요구서 발송 전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가방안을 각 외국 입찰업체에 협상 시작 전에 제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야 외국 입찰업체들은 평가방안에 맞춰 자신의 종합적인 협상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절충교역 등에서 최대 점수를 얻기 위한 협상 안을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협상이 90%정도가 끝난 2001년 9월에 가서야 그것도 두리몽실한 기종 결정 평가방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독자기술 확보를 통한 한국형 전투기의 생산이라는 F-X 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외국 입찰업체들과의 협상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것은 국방부 고위층이 이미 보잉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평가 방안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뒤늦게 2001년 12월 28일에야 확정된 평가방안도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을 강조하던 초기 협상 때와 달리 가격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도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던 보잉사를 배려하고자 하는 국방부 고위층의 압력이 작용한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평가기준을 설정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비록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머물렀지만 내용적으로는 F-X사업 평가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제안요구서 발송 전 환율 환산방법 미공개’ 또한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공정한 평가를 가로막고 보잉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미 보잉과의 추가 협상 결과 42억 6,400만 달러로 F-15K 가격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다소의 판매가격보다 400만 달러가 저렴한 가격”이라는 국방부의 지난 해 5월 20일 공식 발표는 “화폐 종류는 달러를 기준으로 하되, 타 통화사용 시에는 가격 제안시점의 달러로 환산하여 비교한다”는 애초 국방부의 방침을 어기고 라팔 가격을 2001년 한해 유로 대 달러의 평균 환율을 적용함으로써 F-15K 가격을 라팔 보다 싸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었습니다.(한겨레 2002년 5월 21일 보도) 이 같은 사실은 제안요구서 발송전에 환율 환산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특정사에 유리하게 평가하기 위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제안요구서 발송전 평가기준 미설정 및 환율 환산 방법 사전 미공개’는 술한 문제점 가운데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F-X 사업 평가가 애초부터 잘못 되었으며 따라서 F-15K 도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그 같은 감사 결과는 가중치 조작, 점수 조작 등 온갖 의혹들이 사실일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비록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지만 이는 기종평가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결코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 F-X 기종평가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서도 도리어 그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감사 업무 자체를 근본적으로 회의케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는 감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최소한 내년 1년만이라도 F-15K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2) 절충교역 위반 등 보잉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은 F-15K도입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F-15K 도입에 관한 보잉사와의 본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보잉사가 일방적으로 절충교역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거의 속수무책으로 보잉사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본 계약이 체결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잉사는 지난 2001년 8월 민항기 날개의 중요 구조물인 ‘섹션 일레븐(Section 11)’을 호주에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5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섹션일레븐을 우리 나라에 주기로 한 한국항공과의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를 일방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대신 보잉사는 민항기 출입 구조물(Door Package) 등 13가지 단순 판금 조립체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이 물량은 절충교역으로서의 가치가 낮아 한국항공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계약조건상 절충교역 이행계약은 절충교역 계약 이후 6개월 이내 조달본부와 주 계약업체 간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2년 12월 26일 내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다”고 변명했지만 이행계약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항공이 2002년 7월 27일까지 보잉과 체결한 절충교역 액수는 2001년에 약속했던 금액의 60%정도에 불과한 6억 1천만 달러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향후 10년간 확정된 직접 생산물량은 겨우 3억 7천 7백만 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02년, '03년에 제공키로 한 1억 2천 7백만 달러 규모의 민수 물량도 '03년, '04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절충교역에 관한 이 같은 보잉사의 계약위반과 횡포는 2002년 F-X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잉사는 내부적인 이유를 들어 본 계약 사항인 F-15K 32대 분의 전방동체 및 주 날개 물량 등의 적기 이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15E 설계변경에 따른 기술자료(Export Licence)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도입 시기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보잉사가 섹션 일레븐을 일방적으로 호주에 넘긴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한 평가가 원인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절충교역 등의 계약 위반은 보잉사와의 계약이 얼마나 처음부터 굴욕적인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잉사와의 계약 이행 실태를 비롯한 보잉사와의 계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국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같은 보잉사의 불법과 횡포가 묵인되고 또 그와 관련된 국방부의 전횡 및 횡포가 방치된다면 F-X사업의 파행적 집행과 그에 따른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 및 국익 손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F-15K 도입관련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그 전제 하에서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3) F-15K 도입과 관련한 온갖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제 더 미룰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종 평가가 부적절했다”,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불철저하다”, “엔진 구매계약이 원가보다 높게 계약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F-X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타당성에서 제기된 온갖 국민적 의혹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술한 의혹 가운데 드러난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야 옳습니다.

“F-15K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GE사 엔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당시 권력핵심부에 대한 보잉사 및 GE사의 로비스트인 최규선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로써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감사결과에 의거해서 말하면, 지엽말단적이고 비본질적인 지적에 그치거나 아니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온갖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온갖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서도 내년도 F-15K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4) 지금 F-15K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2의 울곡비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F-15K 도입 본 계약이 체결된 지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F-15K 도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점들이 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F-X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뻔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방부의 오만과 전횡, 불법과 독선으로 얼룩진 F-X 사업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와 국익 손실은 돌이키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도입비의 2~3배에 이르는 운영유지비 부담 등 장기간에 걸쳐 나라 살림이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질 것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F-15K 도입 사업이 제2의 울곡비리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5) KF-16 추가 생산 등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도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KF-16보다 작전반경이 넓고 고성능의 F-15K를 도입해야 영공 방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F-15K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KF-16 20대 추가 생산을 위한 예산으로 1,108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F-15K도 도입하고 KF-16도 계속 생산한다는 것은 국방부가 국방예산에 대한 합리성이 없이 자신의 기득권 확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자 F-15K 도입이 명분이 없음을 국방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중복투자에 따르는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도 F-15K 도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내년도 F-15K 도입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4.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국회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03년 11월 10일

【청원인】 성명 : 상임대표 문규현 (인)